



이달의 제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15대 총선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자세



심 무 섭
경남도지회장

반만년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 조상은 농경기마민족이었으며 지금 우리 또한 농민의 자손임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위정자, 학자, 기업가등 모두 할 것 없이 농민의 자손인데 우리 농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길없는 세월속에 총을 쏘니 총선이요, 대포를 쏘니 대선이라고 전과매체를 타고 궤전에 들리니 철새처럼 때가되면 찾아와 자기만이 최고의 선량(選良)이라며 고개숙여 주권국민의 예우를 갖추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웅변대회의 장이 어제의 현실이었다고 하면 세상사를 잘못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4월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가 무엇인지 잘모르는 순수한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달변의 솜씨로 유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메아리 되어 보답하는 식상함에 주권행사의 갈등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주권 행사이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얻어진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성숙한 판단력과 소신으로 공약(公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참신한 선량(選良)을 선택하여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위정자들만의 전유물 처럼 선거유세에서 메아리가 되고 마는 세계화, 역사바로 세우기가 아닌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세계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순수 농민

의 충심으로 몇가지만 제언(提言)하여 본다.

36년 일제압박으로 부터 해방되기 무섭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짧은 역사속에 오늘과 같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그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및 서비스 산업이 성장의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지고 농촌은 그만큼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일반적 희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모든 방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었지만 농촌사회 만은 상대적으로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면에서 발전이 지체되고 낙후되어 산업간, 도농간, 격차속에 갈등만을 증폭시켜 위정자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불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나 그래도 저항감보다 일종의 숙명인 양 순응하며 체념하여온 게 어언 반세기이고 보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

특하면 1차 산업이라고 하며 비교우위만 논하며 3D 산업이라는 명어를 씌워 청장년층을 도시로 내몰아 농촌은 고령화, 황폐화 시켜놓고 성역화를 하여야 한다. 기술농업을 하여야 한다, 전업화를 하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모르겠나만은 성역화하고 기술 농업화하고 전업화하여 기실(其實) 그 과실은 누가 가져가고 농촌 농민은 지금 어떠한가? 어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모을 줄 아는 책임있는 공약(公約)으로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농림수산업에서부터 첨단산업까지 균형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과 국민의 혈세인 자원의 배분을 물이 높을수록 낮은 대로 흘러 스며들 듯 착박한 농어촌지역과 농민의 가슴에 족족한 단비가 되도록 입법 활동을 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보완 시킬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우리 농민도 이제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여 손을 들어줄 줄 아는 성숙된 경험을 가졌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누구 한사람의 빛더미 해결도 어렵도록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국제시장 질서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축산분뇨다 하며 시키는대로 하였건만 비전은 커녕 내일을 불투명 하게만 하였는데 기계화하여 얻어진 부가가치와 기술농업화 하여 만들어진 화학비료, 농약, 사료에 의존케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지며 부가가치는 누가 가져 갔는가? 결국 자본과 기술을 제공한 2차 3차 산업의 주체들 아닌가?

그리고 또 7% 경제성장과 5% 물가인상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방송매체에서 들은 바 있다. 물가인상 소리때 마다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가 어떻게 쌀값이 몇%고 돼지고기, 쇠고기 값이 몇%고 과일이 몇%고 하며 난리들인데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야 한다면 농수산물이 어찌했다고 툭하면 물가인상의 주범인 양 범석하니 물지각한 일부 소비계층이 부를 과시하듯 앞다투어 수입농수산물을 사들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며 '60년대의 앵겔계수와 만불시대 앵겔계수는 분명히 다를진데 과연 가계지출액중 농수산물 구입비가 총지출액중 몇%인지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안다면 물가지수 산출기준부터 만불시대에 맞추어 수정하여 주길 바랄 뿐이다.

식량자급, 식량안보차원 이전에 생명유지, 건강증진에 없어서는 안될 농수산물 보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따름인 승용차, 고급전자제품, 고급가구, 고급의류, 고급주류, 고급서비스, 고급교육 문화

비들이 모르긴해도 6~7십년대의 수천 수만% 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것을 배아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감으로 가계지출이 과소비가 되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니 하는 말이다.

아직도 어렵게 알뜰하게 쪼개어 사는 모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향간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요즈음 소비와 생활패턴이 짐은 없어도(전세를 살더라도) 승용차는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빚을 지더라도 초대형 가전제품이 있어야 하고, 승용차가 있으니 주말이면 레저를 즐겨야 하고, 적어도 모임 몇개 이상을 가지고 연말연시면 먹고 마시고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과소비에 일부 물지각한 계층의 해외 나들이까지 이 모든 책임이 전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열경쟁과 지나친 마케팅의 사회문제로부터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는 거대자본에 의한 기술, 유통 집단과 국가경제를 입안 관리하는 위정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원망한다면 우매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뭉쳐진 촌사람으로만 매도되어질까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어느한 쪽(농림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속에 성장 발전된 아까운 국력을 넘치는 듯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구조적 문제속에 선진경제국가로 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계속 희생을 강요한다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는 멀기만 할 것이다.

모름지기 위정자들이 선량(選良)이 되려면 전문성도 있어야 겠지만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여서는 아니 될듯하며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모을 줄 아는 책임있는 공약(公約)으로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농림수산업에서부터 첨단산업까지 균형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과 국민의 혈세인 자원의 배분을 물이 높을수록 낮은대로 흘러 스며들 듯 착박한 농어촌지역과 농민의 가슴에 족족한 단비가 되도록 입법 활동을 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보완 시킬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우리 농민도 이제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여 손을 들어줄 줄 아는 성숙된 경험을 가졌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만에 하나 지역이거주

의·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당선만 되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남발성 공약(空約)의 말만 잘하는 후보자는 설자리를 잃고 말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후보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를 선량(選良)으로 선택하여 귀중한 주권 행사를 하였으면 한다.

첫째 :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료 부가세 전면 영세율 적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 원료인 단미사료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줄 선량

둘째 : WTO 체제에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저세율 관세의 허점을 이용한 혼합분유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낙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선량

세째 : 낙농진흥법 개정과 같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선량

네째 : 전국토의 70%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산단지화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환경적합형 축산기반 시설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할 선량

다섯째 : 잘못된 우유논쟁으로 낙농가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 분유체화 현상과 같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한 선량

이외에도 빠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선량의 애국충정에 기대하면서 끝으로 정당간, 지역간의 이해관계에서 상호신뢰와 균형 잡힌 조화속에서 생산성 높은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 의사당의 모습을 그려본다.

농민과 농촌(농업) 발전을 위하여 이런 후보를 선택하자



이 상 섭
강원도지회장

지금도 묵묵히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의 낙농가족과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지키는 영농후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한해 우리는 세계화의 구호와 역사 바로세우

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 이념의 갈등과 어려운 경제난을 체험하였다. 게다가 우리 낙농인의 요구보다 미흡한 유대인상과 낙농진흥법의 개정이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하고 말았다.

물론 실망스런 마음이 컸지만 설상가상으로 낙농인